

# 감액 보조금 추경서 '부활' 논란

## 대구시, 74억 재편성...총액 대비 일률삭감 의회 책임론도 대두

대구시가 지난해 의회에서 감액된 민간경상보조금을 올해 추경에 다시 편성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된 금액은 63건에 74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민간경상보조 또는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 521건에 1

천320억원(일반·특별회계 포함)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민간경상보조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일률적으로 제출된 예산의 10%를 삭감했다. 521건에 132억원을 줄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삭감된 보조 사업 가운데 63건에 74억

원을 추경에 재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대구시의 이같은 추경안 편성은 총액 대비 일률적으로 삭감한 대구시의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반드시 지급돼야 할 범안로 운영적자분 재정지원액 35억원과 청소용역비 등을 삭감한 것이다.

대구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부회 의원은 20일 열린 2006년도 대

구시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심사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 이유를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연수 대구시기획관리실장은 "삭감돼서는 안될 예산들이 지난해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씩 삭감되는 되는 바람에 올해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